

주간 통일정세

2018-03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1.15	남북회담 데뷔한 北 현송월...세련된 차석대표 역할(연합뉴스)
	1.16	北, 평창 실무회담 앞두고 '남북관계 자주적 해결' 주장(연합뉴스)
		北매체, '한미군사훈련 연기 대신 완전 중지' 거듭 요구(연합뉴스)
	1.17	北김정은, 평양교원대 시찰...“학생들 창조적 능력 높여야”(연합뉴스)
		北신문, 실무회담 당일 “南당국자 차별있게 처신해야” 주장(연합뉴스)
1.18	北 제네바 차석대사 “밴쿠버 외교장관회의는 도발”(연합뉴스)	
1.19	김일국 北체육상 스위스 도착...19일 IOC와 접촉(연합뉴스)	
군사	1.16	미, 한국에 '첨단' EC-130H 전자전기 이동 배치(연합뉴스)
	1.17	38노스 “북한, 남포조선소 SLBM용 바지선 가동 준비중”(연합뉴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 “미군, 北과 충돌 대비 진지한 훈련중”(연합뉴스)
1.18	'남북 교신 통로' 서해 軍 통신선 완전 복구...정상가동 시작(연합뉴스)	
경제	1.16	아사히 “北선박, 안보리 제재피하려 아프리카 선박이용 밀수”(연합뉴스)
	1.17	“北, 지난해 국제 특허·상표 출원 8건”(연합뉴스)
사회 문화	1.13	장웅 北IOC위원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단일팀 IOC서 고려중”(연합뉴스)
	1.15	北, '민족자주·화해' 등 강조하는 선전포스터 제작(연합뉴스)
	1.18	“北,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평양~원산 왕복 8유로”(연합뉴스)
외교 국방	1.13	北매체, 美항모 출동에 “올림픽에 항공모함 출전종목 없다”(연합뉴스)
		“美국무부, 대북제재 PSI 철저히행 지지 공동성명 발표”(연합뉴스)
	1.17	고노 일본 외무상 “요르단, 북한과 외교관계 끊기로”(연합뉴스)
	1.18	미 국무부 “지금은 북한과 대화 나눌 때 아니다”(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테이블에 앉겠지만 문제해결 확신 못해”(연합뉴스)
		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달라”...미국에 사과요구(연합뉴스)
北외무성, 타이베 유럽 6개국 순방 비난(연합뉴스)		
北,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 비난...“해상봉쇄는 전쟁행위”(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1.17	평양교원대 현지도	박태성, 조용원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8. 1. 17.

■ 北김정은, 평양교원대 시찰…“학생들 창조적 능력 높여야”(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교원대학을 찾아 교육과학전시관, 교육조종실, 다기능교실,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등을 둘러보고 “교원의 자질이 높아야 학생들의 실력이 높아지고 교원 진영을 적격자로 잘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이 올해 첫 공개활동으로 북한 과학연구의 심장 격인 국가과학원을 찾은 데 이어 평양교원대학을 시찰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을 인재 양성과 과학발전 등 내부적 동력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됨.
- 이번 시찰에는 박태성 당 부위원장과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수행했으며 현지에서 김수길 평양시 당 위원장이 영접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8. 1. 15.

■ 남북회담 데뷔한 北 현송월…세련된 차석대표 역할(연합뉴스)

- 북한 모란봉악단 단장 현송월이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예술단 파견 남북 실무접촉에 북측 대표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일반 회담 대표로 참석했지만 회담 단장인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 국장 옆에 자리함.
- 남측 대표단을 판문점 북측 지역의 통일각 로비에서 맞이할 때도 권 국장 옆에 서 있었고 전체회의 때는 통상 차석대표 자리인 수석대표 오른쪽 자리에 위치함.
- 현송월은 작년 10월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올라 이번 실무접촉에 나온 대표 중에서는 가장 정치적 위상이 높는데, 이런 현실이 반영된 모습으로 보임.

2018. 1. 19.

■ **김일국 北체육상 스위스 도착…19일 IOC와 접촉(연합뉴스)**

- 김일국 북한 체육상 겸 민족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에서 열리는 남북한 회담 참석차 18일 스위스에 도착함.
- 김 체육상은 이날 오후 7시께 공항을 빠져나와 장웅 위원과 IOC 측이 준비한 차를 타고 로잔으로 이동함.
- 김 체육상은 선수단 규모 등을 묻는 말에 베이징 공항에 도착할 때와는 달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장 위원은 "나는 IOC 위원 신분이라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다. 이미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발언함.

다.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8. 1. 16.

■ **北, 평창 실무회담 앞두고 '남북관계 자주적 해결' 주장(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을 하루 앞둔 16일 남북관계 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거듭 주장함.
- 노동신문은 이날 '북남관계 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북남관계는 철두철미 우리 민족 내부 문제"라며 "외세가 북남관계 문제에 끼어들면 그의 이해관계가 작용하여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는데 난관이 조성되게 된다"고 밝힘.
- 신문은 "민족 공동의 통일애국 이념인 우리민족끼리를 근본 입장으로 삼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 자주적 위력으로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北매체, '한미군사훈련 연기 대신 완전 중지' 거듭 요구(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6일 '합동군사연습은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주되는 요인' 제목의 논평에서 "날짜나 뒤로 미루고 핵전쟁연습에

동원되는 침략무력이나 조절하는 흥내를 낸다고 하여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이 달라지거나 그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마련을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면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의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도 ‘전쟁 불안난 소동을 완전 중지해야 한다’는 글에서 “현시기 합동군사연습을 완전중지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미국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용단”이라며 “대조선 핵선제타격을 위한 핵 전초기지들은 물론 미국 본토 전역은 공화국의 핵타격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고 주장함.

2018. 1. 17.

■ 北신문, 실무회담 당일 “南당국자 분별있게 처신해야” 주장(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7일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온당치 못한 처사’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 성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거론하면서 ‘얼빠진 수작’, ‘고약한 나발’, ‘악담패설’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함.
- 신문은 “북남관계가 개선의 첫걸음을 뗀 데 불과한 지금 남조선 집권자가 벌써부터 우리를 자극하며 불순한 흥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것은 절대로 스쳐지날 수 없다”며 “남조선 집권자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한 마디 한 마디에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그의 환심을 사보려는 구차스러운 심경이 그대로 비껴있다”고 주장함.
- 또 “남조선 당국은 오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지만 그에 역행하는 반통일적 망동에 대해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은 북남관계와 관련한 우리의 립장과 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주장함.

2018. 1. 18.

■ 北 제네바 차석대사 “밴쿠버 외교장관회의는 도발”(연합뉴스)

- 최명남 북한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다뤄진 대북 제재 논의를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발언함.

- 최 차석대사는 이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뱅크버 회의는 해롭고 위험하다. 평화 정착·긴장 완화 노력과 과정으로 북과 남을 유도하는 역할을 못 할 것”이라고 폄하함.
- 최 차석대사는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적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능력을 갖췄다.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양쪽 모두에 대비하고 있다”고 발언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8. 1. 17.

■ 38노스 “북한, 남포조선소 SLBM용 바지선 가동 준비중”(연합뉴스)

- 16일(현지시간) 38노스는 지난 6일 북한 평안남도 남포 해군 조선소를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건조 중인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 발사 시험용 바지선이 계속 가동 준비작업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힘.
- 38노스에 따르면 남포 조선소 내 육지에서 건조 중이던 SLBM용 바지선은 지난 달 11~14일 사이 인근 부두로 옮겨졌고, 6일자 위성사진에서는 작은 해상 기중기가 바지선 옆에 정박했으며 기중기 활대가 바지선 쪽으로 뻗어 있는 모습이 확인됨.
- 이 작업의 목적이나 바지선 가동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바지선과 해상 기중기가 모두 부두에 있으므로 바지선 가동을 발표하기 전 이를 수리하는 막바지 단계일 수 있다고 38노스는 예상함.

나. 한국 및 미국

2018. 1. 16.

■ 미, 한국에 ‘첨단’ EC-130H 전자전기 이동 배치(연합뉴스)

- 미국이 14대밖에 운영하지 않는 전자전기를 한국에 최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됨.
- 디 에비에이션니스트닷컴, 위아더마이터 등 미 군사 전문매체는 미 공군 소식통을 인용해 통신망 교란과 방공망 제압 능력을 갖춘 EC-130H ‘컴패스 콜’(Compass Call) 전자전기 한 대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

으며, 미 공군도 14일 트위터를 통해 EC-130H 한 대가 일본 도쿄도(東京都)에 있는 미군 요코다(横田) 공군기지에서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했다고 밝혔.

- 그러나 이 전자전기가 한국에서 어떤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는지, 언제까지 배치될런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음.
- 이 전자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적 통신망을 교란, 아군에 대한 대응능력을 봉쇄시키는 강력한 전자전 수행 능력 보유이며, 이를 통해 공중과 지상의 아군(동맹군 포함)과 특수전 부대 지원 및 전술지휘통제 임무 수행 가능함.

2018. 1. 17.

■ 미 하원 군사위원장 “미군, 北과 충돌 대비 진지한 훈련중”(연합뉴스)

-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군이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매우 진지하게 훈련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밝혔.
- 손베리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관한 무력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함.
-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군사 옵션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매우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훈련 노력도 매우 진지하다”고 말하면서 “미군은 (군사옵션) 준비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2018. 1. 18.

■ ‘남북 교신 통로’ 서해 軍 통신선 완전 복구..정상가동 시작(연합뉴스)

- 우리 군 당국이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앞두고 교신 창구인 서해지구 군 통신선 전화용 동케이블 복구작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됨.
- 군 관계자는 18일 "어제 오전 11시 2분 부로 서해지구 군 통신선 동케이블이 완전 복구돼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
- 국방부는 최종 점검을 마치고 오는 20일부터는 과거 서해 군 통신선이 정상 가동되던 때와 같이 오전과 오후 1차례씩 시험통신을 할 방침으로 서해 군 통신선 복구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남북 군 당국은 본격적으로 군사당국회담 준비를 위한 교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됨.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2018. 1. 16.

- 아사히 “北선박, 안보리 제재피하려 아프리카 선박이용 밀수”(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하려고 아프리카 국가 선적의 선박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함.
 - 아사히는 한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해상에서 유류와 물자 등을 건네 받을 때 탄자니아와 토고, 태평양 섬나라인 팔라우 선적의 탱커 선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미군이 확인했다고 전함.
 - 이 신문은 북한이 이들 국가의 선박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 석탄을 수출하고 석유와 석유 정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추정함.

2018. 1. 17.

- “北, 지난해 국제 특허·상표 출원 8건”(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8건의 국제 특허 및 상표를 출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인용해 17일 보도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3건의 국제 특허(Patents)와 5건의 국제 상표(trademarks)를 출원함.
 - 북한이 지난해 출원한 특허는 전기 절감을 위한 전류 안정화 장치, 고성능 방수제, 인삼 등 건강식품과 관련한 바이오 나노 골드 다당류 콜로이드 용액의 제조 방법 등이다. 북한의 지난해 특허 출원은 2016년 5건에 비해 2건 줄었음.

다. 대외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8. 1. 13.

■ **장웅 北IOC위원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단일팀 IOC서 고려중”(연합뉴스)**

- 장 위원은 로잔 방문을 마치고 13일 평양으로 귀국하기 위해 경유한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제안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단일팀 구성의 성사 여부에 대해 “이미 상정된 제안이기 때문에 IOC에서 고려 중”이라며 “그건 어디 한 쪽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IOC 국제빙상올림픽위원회에서 다 함께 (논의) 하는 것이다”고 응답함.
- 장 위원은 또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북한 측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냐고 묻자 “그건 내가 대답할 일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으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단 규모에 대해서는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응답함.

2018. 1. 15.

■ **北, ‘민족자주 화해’ 등 강조하는 선전포스터 제작(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5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자’라는 제목의 올해 들어 제작된 ‘선전화’(포스터)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민족 자주의 기치 아래 온 겨레가 하나로 굳게 뭉쳐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부강·번영하는 통일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전체 조선민족의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외에도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포스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뜻하는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라는 문구가 ‘공화국 창건 일흔돌’이라는 문구와 나란히 배치됐으며, 상단에는 ‘2018 북남관계 개선’이라는 글자가 새겨짐.
- 또 다른 포스터는 북한 대남정책의 핵심 전략인 ‘우리민족끼리’와 ‘민족 자주’를 강조했다며, 남녀 아동이 비둘기를 날리는 그림과 함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자’라는 문구를 부각한 포스터도 공개됨.

2018. 1. 18.

■ **“北,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평양~원산 왕복 8유로”(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나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평양 주재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함.
- 북한이 각국 대사관에 통행료 징수 사실을 알린 서한에 의하면, 오는 20일부터 북한 내 주요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부과되며 일차적으로 평양~원산 고속도로에서 적용되는데 일반 승용차(1km당 0.02유로)로 평양~원산 구간 194km를 왕복하는 데는 약 8유로(편도 3.88유로), 대형버스는 평양~원산 왕복 통행료가

약 27유로라고 함.

- 북한이 이처럼 올해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RFA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해 북한이 새로운 자원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함.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 특이사항 없음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8. 1. 13.

- **北매체, 美항모 출동에 “올림픽에 항공모함 출전종목 없다”(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3일 논평을 통해 “얼마 전 미 해군이 평창겨울철올림픽의 안전유지라는 구실 밑에 칼빈슨(칼빈슨)호 핵 항공모함 타격단이 서태평양 지역에 전개된다고 공표하였다”면서 “민족의 잔칫상에 재를 뿌리고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가로막아보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인 동시에,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역행하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며 “미국은 핵 항공모함 타격단을 조선반도 주변 수역에 들이밀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주장함.
 - 아울러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도발 소동’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미국이 새해에 들어와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배치되게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해·공군 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쓸어든 미국의 침략 무력은 판도와 미국본토

까지 타격권 안에 넣고 있는 우리 화성 포병들의 제일 좋은 사냥감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함.

■ **“미국무부, 대북제재 PSI 철저히행 지지 공동성명 발표”(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포함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 조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성명은 PSI 운영전문가그룹(OEG) 16개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와 2397호에 적시된 PSI 관련 조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북한의 불법적인 밀수행위를 적발할 것을 촉구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짐.
- RFA는 “이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재원이나 자금 조달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함.

2018. 1. 18.

■ **미 국무부 “지금은 북한과 대화 나눌 때 아니다”(연합뉴스)**

-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북미 간 대화 여부와 관련, “우리의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북한과 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가 아니”라고 밝힘.
-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가까이 진지해지려는 용의를 보인다면 좋겠지만 북한과 우리는 그 지점에서 동떨어져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테이블에 앉겠지만 문제해결 확신 못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대화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앉는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발언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그들(북한)은 25년 동안 대화를 했지만, 우리의 전임 대통령들을 이용했다”고 주장함.

■ **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달라”…미국에 사과요구(연합뉴스)**

- 17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리성철 참사관은 유엔 총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의 자주권과 관련된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함.
- 문제는 북한에 대한 명칭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북한대표부는 지난해 12월 외교관의 면세카드 갱신을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에 요청했는데 카드에 국가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대신 ‘북한(North Korea)’이라고 적혀있었음.
- 리 참사관은 이를 “아주 무례하고 터무니없는 행동”이라고 규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외교 문제를 정치이슈화하려는 부정적이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 따라 움직인다”고 지적함.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2018. 1. 18.

■ 北외무성, 日아베 유럽 6개국 순방 비난(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유럽 6개국을 순방해 대북 압박을 촉구한 사실을 비난함.
-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대변인은 1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일부 유럽 나라들을 행각한 일본 수상 아베가 이 나라들과 쌍무관계를 협의하는 기회에 매년 우리의 핵, 미사일 개발과 납치문제를 거들며 이 나라들을 반공화국 압박 공조에 끌어넣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아베 일당이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걸고 들며 반공화국 압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국내에서 국난을 조작하여 온 일본 땅을 공포 분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 현행헌법을 개악하여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함.
- 또 "아베 일당이 염불처럼 외워대는 납치문제에 대하여 구태여 말한다면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의하여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아직까지 납치문제를 여기저기 들고 다니는 것은 장기집권을 노린 기만극에 불과하며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은 기필코 아베 일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8. 1. 17.

■ 고노 일본 외무상 “요르단, 북한과 외교관계 끊기로”(연합뉴스)

- 고노 외무상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중동의 왕국 요르단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끊기로 했다고 소개함.
- 그는 “요르단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기로 방금 결정했다”며 “일본은 요르단의 새로운 계획을 깊이 환영하며 다른 국가들도 같은 길을 밟고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함.
- 이와 관련,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익명의 요르단 외교부 관계자가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단교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는데, 다만 이 관계자는 요르단과 북한에는 양국 대사관이 개설돼 있지 않고 그간에도 양국 외교관계가 활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함.

2018. 1. 18.

■ 北,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 비난…“해상봉쇄는 전쟁행위”(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이 최근 캐나다 밴쿠버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대북제재 강화 논의가 이뤄진 것을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대변인은 1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미국은 카나다(캐나다)와 공모하여 15일과 16일 캐나다의 방쿠버(밴쿠버)에서 1950년~1953년 미국에 추종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에 가담하였던 나라들을 비롯하여 20개 나라들의 참가 하에 조선전쟁(6·25전쟁) 참전국 외무장 회의라는 전쟁 모의판을 벌려놓았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회의에서 대북 압박 공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 등을 언급한 뒤 미국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함.

- 그러면서 “이 기회에 짓대 없이 미국에 맹종맹동하여 법적 명분도 없고 성격도 모호한 이런 회의에 참가한 나라들에 주의를 환기시킨다”며 “그로부터 초래될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을 충고한다”고 발언함.

Ⅱ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01.14	한미, '평창올림픽 테러방지' 전방위공조...정보공유·합동훈련(연합뉴스)	
	01.15	전경련-美 상의, 한미FTA 동향 논의(연합뉴스)	
		한미, 17일 2+2 확장억제협의체 개최...“포괄적 대북억제 논의”(연합뉴스)	
	01.17		틸러슨 “위안부 문제, 한미일 안보협력 장애물된 적 없다”(연합뉴스)
01.18		틸러슨 “북한과 대화할 때...대북 해법서 한미 차이 없다”(연합뉴스)	
	01.18	백악관, 남북 공동입장에 “북한에 자유의 맛 보여주길”(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01.16		中 쿵쉬안유 “한반도 상황 개선에 국제 사회 지원 필요”(연합뉴스)
			中, 평창에 서열7위 한정 상무위원 보낸다...시진핑 참석 불투명(연합뉴스)
		국회대표단,닷새간 방중...韓中, 단체관광 확대 협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01.16		한반도 위기부각에 힘쓰는 日... “유사시 韓거주 일본인 대마도로”(연합뉴스)
			한미일, 밴쿠버서 ‘北비핵화’ 재확인...압박·대화병행 지지(연합뉴스)

	01.17	한일 외교장관 회동...“위안부 문제 양측 입장 전달”(연합뉴스)	
			日외상, 위안부 사죄는커녕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중단 요구(연합뉴스)
	01.19	외교부 업무보고...“주변 4국과 전략적소통·공조 강화”(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01.18		러 외무부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 한반도 정세 더 악화시켜”(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미국	중국
	01.13	‘중국 대북무역 감소’에 백악관 “환영...대북압박에 도움”(연합뉴스)	
	01.14		중국, 미국의 대만여행법 발효되면 “중미 단교 발생할 수 있어”(연합뉴스)
	01.16	시진핑, 트럼프와 통화 “한반도 긴장 완화계기 계속 이어가야”(연합뉴스)	
미중 관계			中, 밴쿠버 외교장관회의에 불만 표출...“합법성·대표성없다”(연합뉴스)
	01.18	미 공화중진, 중단없는 대북제재 촉구...“우리 주도권 필요”(연합뉴스)	
			中, 트럼프의 대중 무역투자 보호조치에 발끈...“권익 지키겠다”

		(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01.17	20개국 외교장관, 밴쿠버회의서 “남북대화 지지” 성명 채택(연합뉴스)	
		정의용-맥매스터-야치, 美서 회동...“북한에 최대한 압력 재확인” (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01.13		러 외교차관 “제재로 남북대화 물꼬 텃다는 미국주장 비논리”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두고 미국-러시아 설전(연합뉴스)	
	01.14	트럼프 행정부, 러시아 겨냥 새 핵전력 개발 추진(연합뉴스)	
	01.15		러 외무 “한반도 대결 행동 중단되면 북미 대화 적극 지원” (연합뉴스)
	01.18	미 국방부, IS 패퇴에 중국과 러시아를 주적으로 전환(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01.15	중일 또 대치...‘잠수함’ 이어 중국 해경국 선박 ‘영해침범’ 논란 (연합뉴스)	
		중국, 일본의 ‘영해침범’ 항의에 “다오위다오는 中 고유영토” (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01.14	러시아·중국 외교차관 회동...“한반도 긴장완화 협력 강화” (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01.15		러 “日 배치 美 ‘이지스 어쇼어’, 北미사일 요격용 주장 의문” (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8. 01. 14.

■ 한미, '평창올림픽 테러방지' 전방위공조·정보공유·합동훈련(연합뉴스)

- 다음 달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국제테러 조직의 표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의 안보 당국이 테러 공격 방지를 위한 철통 같은 공조 활동에 들어감.
- 정보공유는 물론 시설 안전과 현장 협력, 사이버 테러 대응, 합동 교육·훈련에까지 이르는 전방위 공조이며, 13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안보 라인 관계자들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두 나라의 대(對)테러·안보 관련 기관들은 테러 분자의 한국 입국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테러 관련자들의 신원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아울러 미국 정보기관 등은 테러 분자들의 신원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으며, 또 대회 기간 별도의 상황실을 운영하고 양국 간 연락관 파견 등 인력 교류를 통해 정보공유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임.

2018. 01. 15.

■ 전경련-美 상의, 한미FTA 동향 논의(연합뉴스)

- 대기업 중심 경제단체 전국경제연합회(전경련)와 미국 상공회의소 고위 관계자들이 15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의 경제 현안을 논의함.
- 전경련에 따르면 이날 오후 마이런 브릴리언트 부회장과 제임스 파더리 아시아 담당 임원 등 미국 상공회의소 관계자 4명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을 방문,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엄치성 국제협력실장 등과 환담함.
- 전경련 관계자는 “한미FTA 개정 등 양국 경제계 동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문”이라며 “아울러 올해 ‘한미 재계회의’ 30주년을 맞아 행사 개최 시기, 안건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함.

■ 한미, 17일 2+2 확장억제협의체 개최...“포괄적 대북억제 논의”(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제2차 고위급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15일 밝혔다.
- 회의에는 우리 측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 미국 측 토머스 새넨 국무부 정무차관, 데이비드 트라첸버그 국방부 정책 부(副)차관이 참석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포함하는 확장억제의 원활한 운용 방안을 협의함.
- 국방부는 “이 회의는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EDSCG 정례화에 합의하고, 같은 해 10월 28일 제49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동 회의를 조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확장억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억제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2018. 01. 17.

- **틸러슨 “위안부 문제, 한미일 안보협력 장애물된 적 없다”(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 “이 사안이 한미일 삼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장애물이 된 적은 없었다”고 말함.
 - 틸러슨 장관은 이날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대한 외교장관 회의’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힘.
 - 그러면서 “이 이슈가 미국의 핵심 동맹들이 다루기에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결국은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임.
- **틸러슨 “북한과 대화할 때…대북 해법서 한미 차이 없다”(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라면서 “그러나 그들이 대화를 원한다고 말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고 말함.
 - 틸러슨 장관은 이날 캐나다 밴쿠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대화를 하려면 위협적 행동의 지속적인 중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힘.
 - 틸러슨 장관은 “북한을 다루는 방식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차이는 없다”며 한미 공조를 강조함.

2018. 01. 18.

■ 백악관, 남북 공동입장에 “북한에 자유의 맛 보여주길”(연합뉴스)

-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남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공동 입장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는 이 경험이 북한과 북한의 운동선수들에게 살짝 자유의 맛을 보여주고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함.
-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두 나라가 공동 입장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이번 공동입장 결정이 남북 협상과 대화에도 영향을 주길 바란다는 희망을 밝힘.
- 샌더스 대변인은 “우리는 이것(공동입장)을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통해 국제적 고립을 끝내는 가치를 알게 되는 기회로 본다”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고 그러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나. 한·중 관계

2018. 01. 16.

■ 中 쿵쉬안유 “한반도 상황 개선에 국제 사회 지원 필요”(연합뉴스)

-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은 “비록 관련된 각 나라의 상호신뢰가 부족하고 의견이 제각각이지만 한반도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힘.
-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겸한 쿵 부부장은 남북 대화의 긍정적 추진력의 유지 여부, 정치적 회담으로 이어질지, 북미 대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열쇠로 꼽음.
- 그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해 합리적인 관심사를 전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하길 희망한다고 밝힘.

■ 中, 평창에 서열7위 한정 상무위원 보낸다…시진핑 참석 불투명(연합뉴스)

- 중국이 내달 평창 동계올림픽 때 당 서열 7위인 한정(韓正·64)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측에 통보해온 것으로 16일 알려짐.
- 이에 따라 중국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평창 올림픽 계기 방한은 현재로선 불투명할 전망이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한정 상무위원을 평창올림픽 계기에 한국에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측에 알려줌.

■ **국회대표단,닷새간 방중…韓中, 단체관광 확대 협의(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단장, 여야의원 20명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이 16일 베이징에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 중국측 고위 인사들을 만나 단체관광 확대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함.
- 국회 대표단 관계자에 따르면 대표단은 이날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양 국무위원을 만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팡리위안(彭麗媛)의 여사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시 주석 부부가 참석하면 한반도 평화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아시아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함.

다. 한·일 관계

2018. 01. 16.

■ **한반도 위기부각에 힘쓰는 日…“유사시 韓거주 일본인 대마도로”(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한국 거주 자국민을 쓰시마(對馬·대마도)로 피난시키는 계획을 짜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함.
- 요미우리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을 우선 각 지역의 대피소에 대피하게 한 다음 주한미군 등의 도움을 얻어 부산으로 집결시키는 피난 시나리오를 작성 중이라고 전했다.

2018. 01. 17.

■ **한미일, 밴쿠버서 ‘北비핵화’ 재확인…압박 대화병행 지지(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은 16일(현지시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된 가운데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을 신뢰할만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함.
- 한·미·일과 캐나다, 영국 등 20개국 외교장관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 컨벤션센터에서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함.
-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의장국을 맡은 이번 회의는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실효적 집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임.

■ **한일 외교장관 회동…“위안부 문제 양측 입장 전달”(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반도 안보·안정을 위한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캐나다 밴쿠버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과 조찬을 하고 북핵 및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 장관은 우리 측 입장을 설명했고 고노 외무상은 일본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평창올림픽 참석 여부에 대해 강 장관은 “아베 총리의 참석이 결정될 경우 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전했으며, 일본 측은 아베 총리의 국회 일정 등을 봐가면서 이른 시일 내 회신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함.

■ **日외상, 위안부 사죄는커녕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중단 요구(연합뉴스)**

-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회의 참석차 밴쿠버를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전날(현지시간) 강경화 장관과 조찬 모임 자리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움직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함.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에 진심을 다한 사죄를 요구한 데 반발해 고노 외상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발적 발언을 내놓고 있음.
- 고노 외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을 목적으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안정을 위한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도 이런 발언을 했음.

2018. 01. 19.

■ **외교부 업무보고…“주변 4국과 전략적소통·공조 강화”(연합뉴스)**

- 외교부는 올해 한반도 평화안정 기반 조성 및 실질협력 증진을 목표로 주변 4국(미·중·일·러)과의 전략적 소통 및 공조를 강화해나간다고 밝힘.
- 외교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하에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함.
- 이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 추동,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를 토대로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 이슈는 관리하면서 실질적 협력은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됨.

라. 한·러 관계

2018. 01. 18.

■ 러 외무부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 한반도 정세 더 악화시켜”(연합뉴스)

- 러시아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대북제재 강화 논의가 이뤄진 데 대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함.
- 러시아는 또 자국과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캐나다 주도로 열린 이번 회의가 북핵 문제에 관한 유엔의 권위를 약화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임.
- 러시아 외무부는 17일 내놓은 공보실 명의의 논평을 통해 “밴쿠버 회의 공동 의장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성명에 소개된 회의 결과는 이 행사의 유용성에 대한 우리의 의심을 확인시켜줬다”고 주장함.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8. 01. 13.

■ ‘중국 대북무역 감소에 백악관 “환영…대북압박에 도움”(연합뉴스)

-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해 12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수입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1.6% 감소한 5천434만 달러, 수출액은 23.4% 줄어든 2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지난달 중국의 대북 무역액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미국 백악관이 대북압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고 AFP통신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으며,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대북무역이 급감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힘.
- 백악관은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이 불법(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끝내고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때까지 미국이 주도해 전 세계가 가하는 최대의 압박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함.

2018. 01. 14.

■ 중국, 미국의 대만여행법 발효되면 “중미 단교 발생할 수 있어”(연합뉴스)

- 1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망은 ‘대만여행법’이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종 발효될 경우 양안 관계 긴장은 물론 중미 관계도 심각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함.
- 지난 9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공무원의 자유로운 상호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1979년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한 뒤 대만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피해옴.
- 자칭귀(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관계의 관계 정상화에서 나아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법이 최종 발효되면 중미는 대결국면이 불가피하고 심지어 단교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힘.

2018. 01. 16.

■ 시진핑, 트럼프와 통화 “한반도 긴장 완화계기 계속 이어가야”(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쉽게 올 수 없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함.
- 중신망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반도 정세에 일부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쉽게 올 수 없는 긴장완화의 계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대화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힘.
- 그는 또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과 한반도 평화안정의 유지는 각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단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 中, 밴쿠버 외교장관회의에 불만 표출…“합법성·대표성없다”(연합뉴스)

-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등 한국전 참전 동맹국 중심의 20개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하는 이 회의는 현지시간으로 15일 개막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효적 제재와 외교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이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제외됨.
- 16일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의가 합법성과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힘.
- 그는 관련국들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냉전시기 유엔군의 명의로 회의가 소집됐으며 “더욱이 한반도 문제해결에 가장 중요한 직접 당사국을 빼놓은 채 개막한 회의가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함.

2018. 01. 18.

■ 미 공화당 중진, 중단없는 대북제재 촉구…“우리 주도권 필요”(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 핵심 중진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17일(현지시간)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온 북한과 이를 돕는 제삼자에 대한 완전하고 중단없는 제재 이행을 촉구함.
- 미국 공화당 핵심 중진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17일(현지시간)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온 북한과 이를 돕는 제삼자에 대한 완전하고 중단없는 제재 이행을 촉구함.
- 또한 “우리는 핵심관문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은행들, 특히 중국은행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중국 선박들이 공해 상에서 북한에 석유를 판매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최근 언론보도들은 중국 정부가 해운 약속들에 대한 오래된 나의 회의론을 강화했다”고 지적함.

■ 中, 트럼프의 대중 무역투자 보호조치에 발끈…“권의 지키겠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무역투자 보호책을 언급하자 중국 정부가 자국의 권익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면서 발끈하고 나섬.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미국 기업들에 중국에서 일하는 대가로 강제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했다고 발언한 데 대한 중국 측 평론을 요구받자 이러한 입장을 내놓음.
- 루 대변인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비교적 포괄적인 거 같다”면서 “강제적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 중국은 외국 투자자의 기술 이전을 강제할 어떤 법률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힘.

나. 미·일 관계

2018. 01. 17.

■ 20개국 외교장관, 밴쿠버회의서 “남북대화 지지” 성명 채택(연합뉴스)

- 한국, 미국, 일본과 캐나다 등 20개국 외교장관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

- 컨벤션센터에서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남북 대화 지지 등을 담은 공동 의장성명을 채택함.
- 일명 ‘밴쿠버 그룹’은 성명에서 “남북 대화가 지속적인 긴장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남북 대화에서의 진전을 지지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힘.
 - 이들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이 필수적이며 또 (실현) 가능하다는데 합의했다”며 “(기존의) 유엔 결의를 넘어서는 일방적 제재와 추가적인 외교 행동을 고려하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말함.

■ 정의용-맥매스터-야치, 美서 회동…“북한에 최대한 압력 재확인”(연합뉴스)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지난 주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16일 확인됨.
- 이번 회동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대화 복원과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공통의 대응방향을 조율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주목됨.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국 외교안보참모 간에) 비공개 회동일정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회동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감.

다. 미·러 관계

2018. 01. 13.

■ 러 외교차관 “제재로 남북대화 물꼬 텃다는 미국주장 비논리”(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교차관은 13일(현지시간)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비논리적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남북한 대화 재개가 대북 제재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미국의 설명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함.
- 라브코프 차관은 “미국의 비논리적 국제문제 접근법과, 상호 주권 존중 하에 취하는 행동은 서로 다르다”면서 “(대북·대이란 제재가) 비윤리적이고 잔인하다는 점을 미국에 끈질기게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함.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두고 미국-러시아 설전(연합뉴스)

- 러시아와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 이행 문제를 놓고 날선 설전을 벌임.

-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8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함.
- 모르굴로프는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해당 유엔 제재 위원회도 러시아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틸러슨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러시아의 미온적 대북 제재 이행을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이었음.

2018. 01. 14.

■ **트럼프 행정부, 러시아 겨냥 새 핵전력 개발 추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AP통신이 국방부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 초안을 인용해 보도함.
- 이는 유럽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군사력을 저지하고자 새로운 종류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미국의 핵전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임.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이 초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승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2018. 01. 15.

■ **러 외무 “한반도 대결 행동 중단되면 북미 대화 적극 지원”(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시내 외무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중국 간 협력 기조에 관해 설명하며, 러시아는 북한과 미국 및 그 동맹국들 간의 대결적 행동이 중단되면 북미 양자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 라브로프는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결에서 정치적 해결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공동 제안(로드맵)을 내놓았다”고 상기시키면서 “우선 우리는 모두가 진정하고 모든 대결적 행동을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무기 실험 등과 미국이 한국, 일본과 진행하는 대규모 군사훈련 등의 군사적 조치 추진과 연관된 행동들에 해당된다”고 지적함.

2018. 01. 18.

■ **미 국방부, IS 패퇴에 중국과 러시아를 주적으로 전환(연합뉴스)**

- 미 국방부는 4년 만에 새로 마련하는 국방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군사태세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 보도함.
- 미국이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퇴치에 전념하는 사이 군사기술에서 일취월장, 미국을 거의 따라잡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본격 대응하기 위한 것임.
- 국방부의 새로운 방위초점은 지난달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이 러시아와 중국을 미국의 주적으로 규정한 것과 보조를 같이하는 것으로 주요 강국들과의 경쟁 관계가 미국 국방전략의 전면으로 복귀했음을 뜻한다고 FT는 지적함.

라. 중·일 관계

2018. 01. 15.

■ **중일 또 대치…‘잠수함’ 이어 중국 해경국 선박 ‘영해침범’ 논란(연합뉴스)**

- 15일 오전 10시 15분께 일본 오키나와(沖縄)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열도 앞바다에 중국 해경국 선박 3척이 진입했으며, 이곳은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으로,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음.
- 이에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즉각 주일 중국대사관 공사에 전화를 걸어 “센카쿠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다. 영해 침입은 일본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함.
- 그러나 중국은 자국 함정의 접속수역 진입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2척이 해당 해역에 나타나 중국 해군을 따라다니며 감시활동을 벌였다면서 댜오위다오와 부속도서가 중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반박함.

■ **중국, 일본의 ‘영해침범’ 항의에 “댜오위다오는 中 고유영토”(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열도의 자국 영해 바로 바깥쪽 접속수역에 중국 잠수함과 해경국 선박이 잇따라 진입했다고 항의한 데 대해 중국이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영토라며 강력히 반발함.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일 중국대사 등을 통해 항의한 것에 대해 평론을 요구받고 이같이

답함.

- 루 대변인은 “중국은 다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제기한 어떠한 교섭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는 다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가 중국의 고유영토라는 중국의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마. 중·러 관계

2018. 01. 14.

■ 러시아·중국 외교차관 회동…“한반도 긴장완화 협력 강화”(연합뉴스)

-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는 데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밝힘.
-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간 회담 후 언론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전함.
- 외무부는 보도문에서 “(양측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해 견해를 교환했다”면서 “양측 모두 두 나라가 제기하는 평화적 제안들에 기초해 이 지역 긴장해소와 모든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함.

바. 일·러 관계

2018. 01. 15.

■ 러 “日 배치 美 ‘이지스 어쇼어’, 北미사일 요격용 주장 의문”(연합뉴스)

- 러시아가 일본에 배치될 예정인 미국의 지상형 이지스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기능과 통제권 등에 강한 의혹을 표시함.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연례 신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일본이 새로 도입하는 미국 MD 체계 이지스 어쇼어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우리는 미국이 지구상의 어디든 자신들의 무기를 배치하고 그것에 대한 통제권을 배치국에 넘기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면서 “일본에서 미국이 예외를 만들 가능성에 아주 큰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함.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1.17	미 국무부, 북 인권 및 정보유입 단체 보조금 지원 공고(자유아시아방송)
국제동향	1.19	폴란드, 내년까지 북한 노동자 전원 송환..새 제재로 시기 앞당겨(미국의소리)
	1.16	북, 45년 연속 세계 유일 인권최악국(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1.17	북, 생산책임제 도입으로 인민반 통한 주민통제강화(자유아시아방송)
내부동향	1.19	휴먼라이츠워치 “김정은 정권, 주민탄압 강화”(미국의소리)
북한인권	1.16	통일부 “정부 입장 분명...탈북 여종업원 송환 불가”(연합뉴스)
남한동향	1.17	북민협 “남북, 인도지원 협력 등 안정적 추진 약속 계기되기를”(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1.18	미국 내 탈북자들 “북한 예술단은 체제선전 수단”(미국의소리)
	1.16	세이브더칠드런, 대북사업 일시 중단(자유아시아방송)
대북지원	1.18	NGO, 북한여행 금지령에도 인도적 지원 지속(자유아시아방송)
	1.19	통일부 “남북 고위급회담 정례화·대북인도지원 추진”(연합뉴스)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8. 1. 17.

■미 국무부, 북 인권 및 정보유입 단체 보조금 지원 공고(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정부가 대북 인권운동과 북한 내 정보유입을 위한 지원에 나섬.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 내 정보유입 사업을 펼칠 단체를 지원함.
-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집 취지에 적합한 단체가 선정되면 미화 총15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우선 북한 밖에서 또는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북한 내부로 들여보내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NGO, 즉 비영리, 비정부 단체를 위해 미화 100만 달러를 확보함.
- 다양한 관점에서 본 정보를 이들 단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지원 목표임.
- 또한 인권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바람을 저버린 채 인권유린을 일삼는 북한 당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국무부는 설명함.

2018. 1. 19.

■폴란드, 내년까지 북한 노동자 전원 송환...새 제재로 시기 앞당겨(미국의소리)

- 폴란드가 2년 안에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기로 함. 내년 말까지 현 수준의 60%를 감축할 예정이었지만, 새 대북제재 때문에 일정을 앞당겨 전원 송환 결단을 내림. 폴란드 정부가 북한 노동자를 내년까지 모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확인함.
- 폴란드 외무부는 18일, 내년까지 북한인 근로자 절반 이상을 송환하려던 기존 계획이 유효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힘.
- 지난해 12월2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에 명시된 북한 노동자 관련 조항에 따라 송환 시점을 앞당기기로 지침을 변경한 것임.
- 앞서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12월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서와 임시 거주증 발급 중단에 따라 북한 근로자를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40%와 30% 줄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신규 노동허가서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노동 허가를 받은 북한인 근로자들의 체류 가능 기간이 점차 만료된다는 설명임.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8. 1. 16.

■ “북, 45년 연속 세계 유일 인권최악국”(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북한을 45년째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꼽음. 미국 뉴욕의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전세계 195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평가해 발표하는 ‘2018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으로 분류함.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비밀 경찰 국가(hermetic police state)’로, 억압적이고 범죄적인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면서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프리덤하우스의 세계자유보고서는 지난 한 해 세계 19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개국을 자유국가, 58개국을 부분적 자유국가, 49개국을 자유가 없는 비자유국가로 분류함.
- 비자유국가 중 정치적, 시민적 자유가 가장 부족한 나라들을 묶어 ‘최악 중 최악’으로 분류함.

2018. 1. 17

■ 북, 생산책임제 도입으로 인민반 통한 주민통제강화(자유아시아방송)

- 새해 들어 북한이 인민반을 통한 주민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공장기업소마다 생산책임제가 확대되면서 당, 근로단체 기층조직들을 통한 주민통제가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함.
- 지난해 12월 세포위원장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당, 근로단체 조직들을 내세워 “비사회주의를 섬멸하겠다”고 선언함. 하지만 새해 들어 북한당국은 김정은의 구상과 달리 인민반 조직을 통한 주민통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힘.
- 소식통은 “중앙에서 이처럼 사회적 과제(부담)는 물론 일체 사회적 동원까지 인민반 중심으로 재편하게 된 데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장기업소 ‘생산책임제’와 관련이 있다”며 “올해부터 ‘생산책임제’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언급함.

2018. 1. 19

■ 휴먼라이츠워치 “김정은 정권, 주민탄압 강화”(미국의소리)

-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함.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함.
-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을 탄압하는 조치들을 강화했다고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18일 발표한 ‘2018 세계인권보고서-북한’편에서 밝힘.
- 북한 정부가 여행 제한과 중국의 협조를 통한 탈북자 단속, 외부세계와 접촉한 주민 처벌 등을 강화함. 아울러 북한은 처형 위협과 실제적인 처형, 구금, 가혹한 여건 아래의 강제 노동 등의 수단으로 주민들이 복종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임. 그러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함.
-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김 위원장이 끔찍한 인권 침해와 주민들에 대한 완벽한 위협으로 구축된 국가의 실권을 쥐고 있다고 말함.
-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로 북한 지도자들을 압박하고, 국제적으로 북한 정권을 대할 때 인권 보호가 중심에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몫이라고 강조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8. 1. 16

■ 통일부 “정부 입장 분명…탈북 여종업원 송환 불가”(연합뉴스)

-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와 관련, “송환은 할 수 없다.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북 여종업원들이 자유 의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잘 정착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렇게 말함.
- 북한은 지난 9일 열린 고위당국자회담에서 우리의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제안에 지난 2016년 중국의 북한 음식점에서 집단 탈출해 입국한 여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짐.

2018. 1. 17.

■ 북민협 “남북, 인도지원 협력 등 안정적 추진 약속 계기되기를”(연합뉴스)

- 국내 57개 인도적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17일 남북 당국에 민간단체들의 인도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촉구함.
- 북민협은 이날 서울 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린 2018년 정기총회에서 성명을 발표, “북한 당국은 인도주의와 민족화해의 정신에서 추진하는 우리 측 민간단체들의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해 전면적인 자율성 보장과 함께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힘.
- 이어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 당국회담을 환영하면서 이번 회담이 인도지원 분야의 협력을 비롯한 민간의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한 당국이 성실하게 약속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8. 1. 18

■ 미국 내 탈북자들 “북한 예술단은 체제선전 수단”(미국의소리)

- 미국 내 탈북자들은 북한의 예술단이 북한 정권의 체제선전 수단이라고 지적함. 또 일반 북한 주민들은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말함.
- 북한이 다음 달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140명 규모의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남북한이 합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음.
- 그러나 미주탈북자선교회의 마영애 회장은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스포츠와 전혀 관계 없는 예술단을 파견하는 의도에 의문을 제기함.
- 그러면서 북한 예술단들은 전적으로 체제 선전을 위한 단체라고 말함.

5. 대북지원

2018. 1. 16.

■ 세이브더칠드런, 대북사업 일시 중단(자유아시아방송)

- 국제구호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해 말부터 북한에서 진행하던 지원

- 사업을 중단함.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10월부터 북한 내의 인도주의 지원활동을 중단했다고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 영국에 본부를 둔 세이브더칠드런은 유럽연합의 자금으로 북한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비정부구호단체 중 하나로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 이 단체의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모든 북한 지원사업을 중단했으며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북한 어린이를 위한 지원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함.

2018. 1. 18.

■ NGO, 북한여행 금지령에도 인도적 지원 지속(자유아시아방송)

- 대북제재와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령에도 북한주민을 위한 비영리단체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를 기반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제구호단체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가 지난 달 북한을 다녀옴. 이 단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응급처치 의료품을 평양 인근에 있는 농장 내 진료소에 전달했다고 밝힘.
- 지난 해 9월 미국 정부에 의해 내려진 북한 여행금지령 때문에 이 단체의 미국인 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임. 그러다 보니 미국 관계자들이 아닌 소수의 캐나다 쪽 봉사자들만 북한을 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됨.
- 이 때문에 북한여행 금지령이 본격 시행되기 전인 지난 해 8월, 이 단체는 미국정부측에 이 같은 조치를 우려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음.

2018. 1. 19.

■ 통일부 “남북 고위급회담 정례화·대북인도지원 추진”(연합뉴스)

- 남북 현안의 포괄적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의 정례화가 추진됨.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북 인도지원도 추진됨.
- 통일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남북대화 정례화와 교류협력 재개, 인도적 분야 협력 등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이낙연 국무총리에서 보고함.
- 정부는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했지만 회담 정례화를 끌어내지는 못함.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여러 현안을 큰 틀에서

- 논의하기 위해서는 고위급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통일부는 고위급회담 외에도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분야별 회담도 추진해 나가기로 함.
 - 통일부는 또 남북대화와 국제공조를 토대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도록 노력하는 한편 남북합의의 법제화 및 북한과의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